



민주노동당의 위기
- 심상정 비대위장에게
드리는 고언

3면

다가오는 이명박 시대
- 반노동자적 불도저의 돌진
- 공기업 사유화의 쓰나미
- 위험천만한 친제국주의 정책들

6~7면

삼성 특검 · 이명박 특검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체스볼리바르식 혁명의 유탄?

5면

**중동 범죄 현장을
다시 찾은 전쟁광 부시**

4면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까?

9~10면



서평
- 존 리즈의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

8면

노동자 투쟁
- 뉴코아 · 이랜드 투쟁
- 도시철도 파업
- 만도 매각 반대 투쟁

11~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
1월 19일(토) 오후 3시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
1월 20일(일) 오후 2시

주최: 다함께 참가문의: 02-2271-2395 / atgmail@nate.com 참가비: 하루 3천 원 / 이틀 5천 원

2008년 1월 19일~1월 20일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인용해도 될까요?

“이 정도일 줄은 우리도 몰랐다.”
—이명박의 파격적 친기업 행보에 대한 경
총 소속 한 기업주의 감탄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체 노동자들이
저렇게 [태안]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퍼센트
성장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노에 같은 노동자를 원하는 이명박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
작하겠다.”
—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조세범처벌법,
건축법 등 위반과 위증교사, 범인은닉, 세
금 체납·탈루, 분식회계,
주가조작, 위장전입, 성접대 의혹 등
전과 14범 이명박의 각오

“[론스타]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출
금 조치는 경제발전과 외자유치 확대
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
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를 알리는
데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범죄 기업인을 감싸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에 맞춰 테이
저건 등 새로운 진압장비 사용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법원이
[노조와 시위대에 대해] 파산에 이를
정도의 판결을 내려 줘야 한다.”
—경찰청 경비국장 조현오

“‘인터넷 온라인 집회’를 운영하는
등 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캠페
인을 벌이겠다.”
—사이버 시위나 하라는 검찰

“검찰이 처음부터 (나를) 괴롭혔고, 이중
엔 화유와 협박을 했다. ‘재판은 관히 하
는 것이고 판사는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하
는 것’이라고 회유했다.”
—김경준의 검찰 폭로

“국보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중복주의
딱지 매기기는 ‘여기 간첩 있다, 수사해서
잡아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통신비 인하 – 통신산업 공기업화가 답이다

조태욱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KT 직장협의회

요즘 이명박 인수위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
슈로 부각됐지만 본질적 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통
신비 인하 문제에 매달려 온 시
민단체를 비롯해 〈한겨레〉도 최
근 사설에서 “정보통신부를 해
체하면 통신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
간 담합구조가 문제인 것은 어
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근
본 문제가 아니다. 통신비가 높
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근본적
이유는, 해외 투기자본의 이해
관계를 통신업체 경영진이 대변
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
자인 SK텔레콤, 유선통신 시장
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소유

구조와 이윤 배당구조를 살펴보
면 이 점이 명확해진다.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공기업에서 사유화한 기업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소유지분이 거의 절반(49퍼센트)에 이른다. 두 기업 모두 주식배당의 3분의 2를 월가의 투기자본이 빨아가는 구조로 돼 있다. 즉, 매년 8천억 원

SK텔레콤 본사 앞 ‘통신요금 인하’ 1인 시위

정도가 투기자본에게 유출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통신비 인
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통신비
문제가 불거지면 통신업체는 조
삼모사식 인하 시늉만 하고 그치
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통신비 인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명박

신자유주의 재벌 정권에서는 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기통신법을 개정해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20퍼
센트까지 낮추고, 정부가 SK텔
레콤과 KT의 자사주(약 25퍼센
트)를 매입해 공기업화해야 한
다. 민주노동당은 당당하게 이
것을 주장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감
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
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고통 감내 속에
서 독점적 공기업으로 성장한 뒤
줄속으로 사유화한 역사를 갖고
있다. 또 지금 두 기업 모두 수익
의 90퍼센트 이상이 평범한 사람
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

통신·전기·철도·수도·
가스·정유 등은 공기업화가 답
이다. 헛소리하는 정치인·관
료·언론을 거부하고 진실을 설
파하자.

“새해에는 반드시 강의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강영만(고려대 출교생)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이 또
한 해를 넘겼다. 출교 학생들은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6백40
일이 넘도록 복학을 요구하며 천
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려대 재단은 출교 무효 판결
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후 최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출교된 학생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반대
시위”를 주도했으며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동안 ‘교수 감금’ 등을 핑계로

내세우며 감춰 왔던 출교의 진정한
이유를 이제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
다. 출교는 바로 이견회를 망신주
고 대학 시장화에 반대해 온 좌파
학생 활동가에 대한 공격이었다.

3년 가까이 옥고를 치른 후 최근
출소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
장은 출교생들의 천막농성장을 찾
아 “삼성에 맞선 어린 학생들의 투쟁
은 이사회회 희망”이라고 말했다.

6백40일

그러나 고려대 재단은 부패 범죄
자 이견희에게 굶질거렸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2심 재판장으로 결
정된 박홍우(김명호 교수에게 석

공을 맞을 뻔했던 판사로, 삼성 관
련 재판에서 항상 삼성 편을 든 ‘떡
값판사’로 알려져 있다)와 고대 출
신인 이명박의 당선 효과에 기대서
출교생들을 공격하려 한다. 고려
대 재단은 천막농성을 겨냥해 학내
38곳에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졸한 소송까지 냈다.

반면 보직교수들 중 일부는 “출
교 징계의 과다함을 인정”하며 출
교생들에 대한 학생상벌위원회
재심을 결정했다. 학생상벌위원
회는 재심 후 한 달이 넘도록 내부
이견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록 학생들의 반성을 전제
로 했지만, 2월 중 취임할 신임 총
장 후보 7명 모두 출교가 “안타깝

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반
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고대신
문〉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출교생들은 고려대 재단의 악
랄함을 폭로하고 재단을 더 고립
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삼성
노동자, 지식인 등의 연대 메시지
를 조직하고 있다. 또, 새로 당선
한 학생회장들을 만나면서 학내의
더 광범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07년은 출교 철회를 위
한 연대가 크게 확산된 해였고, 덕
분에 출교 무효 판결이라는 귀중
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출교생
들은 이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올
해에는 반드시 강의실로 돌아가
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와 농민 시인 정설교는 무죄다

국가보안법이 예술의 자유마
저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재
판부는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
에게 불구속재판을 결정한 바 있
다.

그러나 이명박이 당선하고 열
린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이시우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
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증거물
몰수라는 무지막지한 구형을 했
다!

검찰은 “비무장지대, 군사기
지 촬영이 ‘반국가단체’를 이롭

게 할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이고,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화학무기가 있
다고 문제 삼은 그의 보도는 북
한의 ‘남한 선(先)핵사찰 논리’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비무장지대와 군사기지를 사
진으로 찍어 분단의 현실을 고발
하고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위험
을 알리려 했던 것이 ‘죄’라는 것
이다.

검찰은 농민 시인 정설교 씨에
게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죄 위반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

다. 정설교 씨는 농민의 애끓는
심정으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를 주로 써 왔다. 북한 핵을 옹
호하는 글도 있지만, 이것은 토
론할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1만
기가 넘는 미국 핵을 옹호하는
남한 지배자들은 북한 핵 옹호를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

10년

검찰은 정설교 씨가 범민련 후
원회원이라는 이유로 ‘이적단체
가입’ 혐의도 적용했다. 남북 정

상회담이 두 차례나 이뤄진 마당
에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는커녕
이례적으로 정회원도 아닌 후원
회원을 처벌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이 ‘법과 질서’
를 강조하고, 인수위가 ‘간첩 잡
는 실적이 줄었다’고 따지는 분
위기 속에서 한총련 의장 연행과
함께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등 보수 세
력들이 “‘외압’으로 ‘일심회 사
건’이 축소됐다”며 재수사를 요
구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심
상정 비대위원장이 “일심회 사건”

에 대해 “공당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처분을 내리겠다”며
일심회 관련 당원들에 대한 문책
을 시사한 것은 비대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운동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국가보안
법 마녀사냥에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하는 것은 이명박에 맞선 투
쟁을 약화시킬 뿐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시우 작가와 정설교 시인 구형
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시우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
원서를 조직하기로 했다. 진보진
영은 이명박 하에서 벌어질公安
탄압에 맞서 단결된 투쟁을 건설
해야 한다.

최미진

심상정 비대위장에게 드리는 고언

심 비대위장님,

비대위장 수락 연설 때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았지만, 얼마나 고뇌가 컸을까 감히 헤아려 보려 애썼습니다. 굳이 심 비대위장님의 처지에 놓여 봐야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제 진보정당 역사에 대한 간접 경험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름 아니라 심 비대위장님의 “친북 정당”, “민주노총당”, “운동권 정당” 비판 보도를 보고 우려되는 바가 있어 몇 자 적고자 합니다. 대부분 민주노동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그 중 다수는 당 대선후보에게 투표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앞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훈수두는 것에 너무 민감하신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등은 조중동 파워에 비해서는 명백히 진보적인 언론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소유와 통제 면에서 노동계급의 신문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급진적 양념을 곳곳에 가미하지만 그 기초 자체는 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의 한계에서 좀체 벗어나지 않는 매체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인정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것은 당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소원케 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충실하십시오. 당원 다수는 자신의당이 “종북주의적” 또는 “친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

실제로, 당의 대선후보 자신이나 그 선본의 주요 스태프들, 후보의 대(對)유권자 메시지 모두에서 “친북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 의원 자신이 그 선본의 일부였습니다.

“친북” 문제의 최대 쟁점인 북한 핵실험에 대해 외부에 가장 잘 알려진 당의 공식 입장은, 당 대표단 방북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북한 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은 당 대표 연설에 불쾌해 하며 “유감 표명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당 최고위원회의 다수는 자주파였습니다.

일심회 문제에서도, 당 지도부는 최기영 씨를 직책에서 해임하고 대국민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 때도 최고위원회의 다수파는 자주파였습니다.

요컨대 자주파 당 간부 개인들은 ‘주사파’처럼 말했지만 당 자체는 그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당의 사회적 기반이 노동계 지도자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므로 당의 본질이 사회민주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심 의원을 새 지도자로 하는 새 지도부가 들어섬으로써 주요 당 간부 개개인의 언행이 당 자체의 성격에 조응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시기 한국의 정치적 맥



2006년 10월 22일 개최된 민주노동당 전국 당원대회 - 북핵 실험에 대해 일부 당 간부 개인들은 ‘주사파’처럼 말했지만 당 자체는 결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락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정당의 성장은 진보입니다.

그리고 심 비대위장께서 당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대단성입니다.

그러나 당을 개방한다는 것이 더는 “민주노총당”이지 않게 “혁신”하고, 더는 “운동권 정당”이지 않게 “쇄신”하려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파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고전적 맑스주의자들이 “경제와 정치의 분리”라고 부른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층과 개혁주의 정치인 사이의 엄격한 분업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의 연계 고리를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영국 노동당을 미국 민주당처럼 만들려다 실패한 블레어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노총당” 부정으로 말하자면, 심 비대위장님 자신이 민주노총 지도자의 한 명으로 열의를 갖고 민주노동당 창립에 참여하셨는데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심상정 비대위장

은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패러독스의 효과는 연막과도 같습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한 무사안일주의적 특정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문제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투쟁적 단결이 아니라 ‘사회연대전략’ 따위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자제와 양보를 촉구하는 기회주의적 어젠다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든 중소기업인 이든 기왕에 가장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발휘돼야만 견인될 수 있는 것이 사회 변화의 동역학입니다.

노동계급의 힘이 결정적입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처한 객관적 위치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중간계급에 속한 개인들이나 심지어 자본가 개인들도 우리 대열에 가담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운동의 원칙과 규율, 정체성을 그들이 존중하는 한에서 그래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매진해야지, 실용주의적으로 그들에게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포퓰리스트 자본가들 사이에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 버리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운동권 정당” 문제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운동권”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대중운동이야말로 사회 변화의 가장 주된 동인입니다.

물론 정책 선전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려야 사람들은 당 후보들의 공약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정책 선전에 힘썼던 김중철 동지는 “친북” 인사이기는커녕 반주사파 인사였는데도 겨우 3퍼센트의 지지만을 얻었습니다. 정책이나 공약 선전이 공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권 정당

말을 맺겠습니다. 심 의원을 새 리더로 추대한 다수 중앙위원들은 심 의원을 일종의 한시적 위기 관리 지도부 리더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심 비대위장님을 지속적인 지도자로 지지하는 차츰 검증돼야 할 문제이지, “선형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님”(심 의원 자신이 비대위장 수락 연설에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입니다.

그러므로 심 비대위장께서는 당 진로를 둘러싼 평당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논쟁을 통해 당의 모습이 좀 더 분명한 꼴을 갖추 때까지 말을 아끼시기를 조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준비위원회”로 조직화하고 있는 분당파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시기를 촉구합니다. 예리한 관찰자라면 민주노동당의 현 위기에 대해 불만족스런 선거 결과의 책임 전가를 위한 속죄양 삼기 게임에서 다수파 경쟁자의 일시적 곤란을 소수파가 당 외부 세력을 개입시켜 승리한 모습이라고 냉소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당원이라면 누구나 자중해야 마땅한 상황으로 볼 것입니다.

심 비대위장님의 일부 언사에 고무된 기회주의자들이 이 기회에 당을 우경화하려 애쓴다면 우리 다함께는 심 비대위장님 자신도 그것에 책임 있다고 보고 날카로운 비판을 삼가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당 대선후보 경선 후 자체 조사 결과 회원의 거의 4분의 3이 심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드러난 다함께의 고심에 찬 결의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2008년 1월 15일
다함께

새로
나온
소책자



《민주노동당의 위기》

《위기의 민주노동당 —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제2개 정중보판

다함께 펴냄

값 3,000원

이라크가 안정됐다는 새빨간 거짓말

사이먼 아사프

중동 순방 기간 동안 부시는 “이라크가 일 년 만에 완전히 변했다. 2008년에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는 3만 8천 명을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한 ‘증파’ 작전이 이라크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 왔다고 주장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자들은 난민들이 이라크로 돌아오고, 저항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의 이라크는 질병, 살인, 탄압으로 얼룩진 붕괴 일보 직전의 국가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시리아의 이라크 난민들을 상대로 벌인 조사를 보면, 1백 50만 명의 난민 중 78퍼센트가 증파 기간 동안에 이들의 주거지로 미군이 침입하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고 답했다.

2003년 미국이 침략한 이후, 바그다드는 점령군에 맞선 저항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지금 바그다드에서는 증파들 간 ‘청소’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 바그다드는 “치안 장벽들”을 따라 지리적(종파적)으로 분리됐고, 장벽 망루에서 병사들이 장벽 내 거주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난민들은 2007년을 테러와 탄압의 수준이 더 높아진 최악의 해로 기억했다. 응답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문당하거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2007년에 가족을 잃었고, 그 중 2퍼센트만이 가족의 죽음이 ‘알카에다’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증언은 〈성조기〉가 보도한 사망자 수에 관한 비밀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점령군은 2007년 상반기 동안에 만 1만 8천8백32명을 사살했는데, 이것은 점령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수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대량 체포 과정에서 감옥에 수감됐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07년 1월에 미군은 2만 6천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을 수감하고 있었다. 이라크인들이 운영하는 수용소에 2만 4천 명이 더 수감돼 있다.

낙제

한편 이라크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위협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한때 이라크는 중동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민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콜레라와 다른 수인성 질병들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바그다드의 한 병원은 매달 70명의 콜레라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를 보면, 2007년 여름 동안 수인성 질병 발병률이 30퍼센트나 증가했다.

공해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수백 구의 시체가 강에서 발견된 뒤 낚시를 금지했다. 상수도에는 오물이 섞여 있고, 거리에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이라크 어린이 중 3분의 2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실업률이 40퍼센트에 육박한다.

전력 공급은 침략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바그다드의 전력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 하루 9시간 공급 — 이것은 다른 지역에 공급될 전기를 끌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점령군에 대한 지지가 2003년 이래 최저를 기록한 것이 당연하다.

부시는 증파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대부분이 낙제 점수를 받았다.

‘석유법’과 새로운 선거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선거 실시 계획도 중단된 상태다. 수니파와 시아파 간 ‘국민 화합’을 추구한다는 계획은 이라크의 ‘약한 분할’ 계획으로 대체됐다.

부시는 미군에 대한 일일 공격 횟수가

감소한 것을 들이대며 ‘증파’가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저항 중심지가 좀 조용해 진 것은 사실이다. 수니파가 많이 거주하는 라마디의 경우, 2006년에 매일 26건의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군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 곳도 있다. 예컨대 디알라 주(州)에서는 공격 횟수가 70퍼센트나 증가했다.

점령군이 퇴각한 곳들에서 공격 횟수가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 최근 영국군 대변인은 영국군이 바스라에서 퇴각한 이후 영국군과 이라크군에 대한 공격이 90퍼센트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성공의 증거가 아니다. 영국은

최근 새로운 저항의 거점으로 부상한 디알라 주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미군 병사들

사실상 이라크 남부에 대한 통제권을 시아파 저항세력에게 넘겼다.

이것은 전투적 성직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마흐디군을 제압한다는 ‘증파’의 원래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은 알사드르의 마흐디군과 한판 붙어볼 생각이었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군 보고서를 보면, 6만 명의 마흐디군 병사들은 미군과 미군이 지원하는 군대와 전투를 치르기 위해 무기를 모으고 훈련을 하고 있다.

부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소규모 증파’를 준비하는 동안, 이라크의 점령군은 수많은 이라크인들을 여전히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조지 부시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부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폭군 압둘라,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이스라엘의 학살자 에후드 올메르트, 이라크의 졸개 누리 알 말리키를 만나면서 감히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관해 설교하려고 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현장을 다시 방문하는 범죄자처럼 조지 부시는 중동 순방에 나섰고, 중동의 이른바 ‘온건파’ 동맹들을 구성하는 독재자, 학살자, 졸개들을 모조리 만나고 있다.

부시가 중동을 순방한 것은 이미 억압, 고통, 전화(戰火)에 시달리는 중동에 기름을 끼얹기 위해서다. 부시는 이라크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그는 지금 새로운 표적에 총구를 겨누려 한다.

중동 순방 기간에 부시는 “평화, 진보, 기회를 갈구하는 수많은 중동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경쾌하게 말한 후 느닷없이 대(對)이란 전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일요일에 부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독재자 앞에서 “오늘날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 중 하나다. … 이란인들이 억압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란 정부는 전 세계 극단주의자들에게 수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는 중동 순방을 떠나기 전 이란과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는 이스라엘을 방문해 팔레스타인과의 “타협”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시의 요란한 ‘중동 평화 프로세스’는 지키지 않을 약속에 불과하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는 부시와 올메르트 — 2006년에 레바논 폭격을 명령한 이스라엘 지도자 — 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지 못했고, 대신에 팔레스타인 점령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졸개 구실을 하는 마흐무드 압바스가 초대됐다. 부시가 떠나자마자, 올메르트는 가자지구 공습 명령을 내려 14명을 살해했다.

그 후 부시는 알 사바흐 가문이 통치하는 쿠웨이트, 알 칼리파 가문이 통치하는

바레인, 왕자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아랍에미리트 등 겉프만 독재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해 그들의 “경제 기적”을 칭송했다.

부시는 그 다음에 중동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모든 움직임을 매수하거나 잔혹하게 탄압해 왔다.

부시의 마지막 방문지는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통치하는 이집트다. 부시는 이집트 정부를 가리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가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무바라크는 모든 저항을 억눌렀고, 정권 연장을 위해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부시는 임기중 마지막 중동 순방에서 독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되든 다음 미국 대통령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중동에서 전투적 노동자·농민 운동과 연결된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이야말로 제국주의와 그 추종자들이 없는 정말로 새로운 중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갈림길에 선 베네수엘라 - 정부 관료 vs 거리의 대중

“조국과 사회주의가 아니면 죽음을!”
2006년 12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고 차베스가 지난해 1월 취임식에서 맹세한 말이다.

이런 맹세에 비춰보면, 지난주 차베스가 ‘볼리바르식 혁명’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주에 차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진군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올해는 3R, 즉 수정(Revision)·교정(Rectification)·재출발(Reimpulso)의 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차베스 정부가 추진한 개헌안이 지난해 12월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뒤에 나온 말이다.

미국의 부시 정부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대안을 주창해 온 차베스는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다. 차베스가 부르짖은 ‘21세기 사회주의’는 옛 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처럼 보였던 시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처지는 항상 모순적이었다. 2002년 4월 우익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차베스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살해하려 했을 때 그를 구해 준 것은 카라카스 빈민들이었다. 카라카스 빈민들이 대통령궁을 에워싸고 쿠데타 세력으로 하여금 차베스를 석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차베스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관계가 우세한 경제를 관장하고 있고 부패와 억압으로 얼룩져 있는 관료적 국가의 수반이다. 그래서 그의 정책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린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수익을 이용해 사회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려 해 왔다. 볼리바르식 서클이나 각종 미션(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의 기구들은 기층 활동가들을 계속시키는 한편 그들이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하도록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베네수엘라 소수 특권층의 반발에 부딪힌 차베스와 차베스의 동맹 세력들은 국가 기구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기구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최근 차베스 정부는 이

2004년 우익의 차베스 소환에 맞서 시위를 한 베네수엘라 민중, 우익의 반격으로부터 거듭거듭 차베스를 구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다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를 지지하는 대중 정당 —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이하 PSUV) — 창설은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고 동원하기 위한 상명하달식 조치였다. 차베스가 추진한 개헌안에는 훌륭한 개혁들도 많았지만, 차베스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차베스가 포고령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들도 포함돼 있었다.

불만

사실, 개헌 국민투표 결과는 우익의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다. 개헌 반대표는 2006년 대선에서 패배한 우익 후보가 얻은 표보다 겨우 20만 표 많았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는 개헌 찬성표가 차베스의 대선 득표수보다 3백만 표나 적었다는 것

이다. 심지어 PSUV 가입을 신청한 5백 50만 명 가운데 1백20만 명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제안한 개헌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경제 고문인 스테파니 블랑켄부르크(Stephanie Blankenburg)는 〈뉴 스테이트먼〉(New Statesman)[영국의 좌파 주간지]에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2월 2일 국민투표 결과의 본질은 ‘거리의 차비스타[차베스 지지 세력]’가 ‘차비스타 엘리트’에게 보내는 항의였다.” 식품 부족, 물가오름세, 정부의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국민투표에서 차베스 지지 기반의 대규모 이탈로 나타난 것이다.

차베스의 유턴은 이런 불만을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차베스는 범죄와 식품 부족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

하려면 혁명적 과정의 속도를 늦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해야 한다.

식품 부족과 물가오름세에 대처하려면 민간 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을 분쇄해야 한다. 부패를 뿌리뽑으려면 기존 국가 기구를 해체하고 이를 민중권력 기관들로 대체해야 한다.

살바도르 아옌데

그러나 차베스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2002년 쿠데타 주모자들을 사면하고, 대기업들과 친한 군장교 라몬 카리살레스를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1972~73년 칠레의 좌파 민중연합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게 만드는 위험한 조치다. 당시 칠레에서는 미국 닉슨 정부가 후원한 우익들이 점차 공세를 강화하자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독자적 방어 기구인 코르돈[cordones: 대공장들을 연결한 노동자 위원회]을 건설했다.

그러나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는 노동자들의 이런 자주적 행동을 억누르고 우익과의 타협을 추구했다. 그 결과로 노동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자 우익들이 자신감을 얻어 1973년 9월 11일 군사 쿠데타를 감행했다. 그 쿠데타로 아옌데를 비롯해 수많은 좌파 투사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아직 그 정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베스의 후퇴는 ‘볼리바르식 혁명’이 지금껏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오는 1월 20일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을 주제로 방한 강연할 예정이다. 19일에도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에 대해 강연한다.

1 · 26 세계사회포럼 — 세계공동행동을 건설하라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의 호소로 1월 26일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이 개최된다.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보도 자료에서 “1월 26일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하고 밝히고 있다.

현재 유럽 곳곳과 라틴 아메리카,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시위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한국 조직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action126.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 · 빈곤 · 전쟁 · 차별 없는 세계

를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민중운동 단체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는 한미FTA저지범국본,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전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 1 · 26 세계공동행동(이하 1 · 26 행동)은 이명박이 내놓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친제국주의 공세에 대한 한국 민중운동의 첫 대응이 될 것이다.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 유엔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 부대 창립,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 등 전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려 버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미FTA 살릴 마지막 기회는 2월 임시국회뿐”이라며 비준을 주문했고, 통합신당 대표 손학규도 기업주들과 만나서 “조속한 비준에 백번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친 바 있다.

1 · 26 행동은 지배자들의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교가 될 것이다.

또, 1 · 26 행동은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시위이기도 하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 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선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를 죽였던 시위 전담 검거조 부활 계획을 발표

했고, 전자총격총(테이저 건)을 시위대에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총격총은 이미 세계적으로 1백 30명을 죽였고 심장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 살인 무기로 국제사면위원회도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이 추진하는 반동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은 바로 대중 투쟁이다. 1 · 26 행동을 그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1 · 26 행동의 성공적 조직을 위해 매진하자.

김광일

..... 자세한 일정은 12면을 참고하십시오

반노동자적 이명박 ‘불도저’의 돌진을 저지하라

전지운

노회찬 의원은 “이제야 쥐의 얼굴을 한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답게 생긴 고양이가 정권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정말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괜히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빈말도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분명하게 “경제가 성장하면 비정규직을 써도 괜찮다”, “수치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쓰

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이명박은 노동자들이 “태안 사고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일하라고 말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업주의 이윤을 위해서 군말없이 봉사하라는 것이다. 삼성이 낸 사고의 대가와 고통을 어민과 자원봉사자 등이 치르는 것이 이명박은 너무 못했던 것이다.

이명박은 1년 반 동안 15명이 죽어간 ‘사돈’ 기업 한국타이어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군소리가 나오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이

명박에게 줄서기 바쁜 관료들은 이런 죽음이 ‘작업 환경과 무관하다’고 판정했다. 한국타이어 부품업체인 ASA에서 사측이 노조 회의를 도청해 온 것도 ‘자원봉사 않고 군말을 늘어놓는’ 것이 패썹해서였을 것이다.

이런 이명박을 보고 기업주와 관료들은 과감하게 노조 탄압과 노동자 공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랜드와 도루코는 노조 지도부를 대량해고했고, 재능교육은 노조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구사대 폭력 침탈이 있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송파구청에서는 새해부터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자행됐다. 서울교육청은 2년 전 연가 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71명을 강제 전보하려 한다.

올해는 비정규직 악법이 1백인 이상 3백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지난해의 무려 7배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나 외주화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 노동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제를 네거티브제로 바꿔 무한 확대하는 비정규직 악법 개악안까지 제시했다. 인수위는 일단 ‘유보’했지만 꺾혀 뒀을 것이다.

더구나 온갖 탈법·비리 자판기인 이명박이 ‘준법’을 들먹이며 집회·시위 자유도 파괴하려 한다. 최루액, 테이저건,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시위 참가자를 공격하고 현장 검거하려 한다.

자원봉사

그래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무현 시대에 9백80명이 구속됐다면 이명박 시대에는 9천8백 명이 감옥갈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이명박은 막강한 잠재력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공격하기보다 각개격파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이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부문의 벽을 넘는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또 “무분류·무파업을 선언

하면 해액을 준다”는 “노사민정 대타협” 등을 이용해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확고하게 투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노무현이 개발해 둔 사악한 ‘노동귀족론’도 인수할 것이다. 대기업 노조를 ‘기득권’으로 매도하며 공격하고 투쟁 자체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조직 노동자들의 선도적 투쟁을 지지하고 그 힘을 전체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 점에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노조 이월금 중에 1억 9천만 원을 비정규직과 이랜드 투쟁 기금으로 낸 것은 고무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7월 초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한미FTA 중단 등을 내건 파업 계획을 내놓은 것도 좋은 일이다. 물론 노동자 파업은 필요하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주머니칼이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7월에 진정한 파업을 할 생각이면 지금부터 이랜드 투쟁 등을 승리로 마무리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점에서 이석행 위원장이 “시도 때도 없이 도심에서 길막고 집회하는 것(을) … 반성해 봐야”(《프레시안》인터뷰) 한다고 말한 것은 우려했다.

다가오는 반동의 ‘불도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 등 부문을 넘는 노동자 연대와 강력한 투쟁에 있다.

군사독재식 언론 사찰 음모

한나라당과 우파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얼마나 흥측한 야망을 키워 왔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이 5공 군사독재의 국보위 출신인 이경숙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더니, 군사독재 때처럼 언론사 간부와 광고주의 ‘성향’을 조사하며 언론 사찰과 통제 계획을 추진한 것이 폭로됐다.

인수위와 사찰 문서를 작성한 문화관광부 국장 박광무는 “새벽에 졸다가 ‘성향’이라고 잘못 쓴” 것이고 “개인적인 불출행동”이라며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냈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문화관광부는 이명박 당선 직후부터 인수위에 보고할 주요 일간지의 경영 상황과 내부 동향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다.

이명박은 오래전부터 MBC 사유화와 족벌 언론에 대한 매체 검열 허용 등 언론 개편 계획을 밝혀 왔다. 족벌 언론과 유착하면서, 비판적 보도와 언론인은 광고주를 통한 압박과 사찰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조중동은 이런 계획에 야합해서 ‘언론 자유에 대못질’할 자세를 이미 보이고 있다.

게다가 박광무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언론뿐 아니라 문화산업, 체육계, 종교계 등에 대해서도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추진중인 것이다.

이렇듯 정권 인수도 하기 전부터 ‘독재정권의 후예’라는 흥측한 본색을 드러내는 이명박을 경계해야 한다.

강동훈

다가오는 이명박의 반동과 개혁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한국전력·철도공사·우체국 사유화 추진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도 “공기업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됐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소강 상태에 빠졌다”며 2백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유화, 통폐합,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런 계획은 지난해 이명박이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추진하면서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며 사유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돈벌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사유화를 통해 경쟁이 도입되면 효율성이 높아져 가격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유화는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게 공기업을 넘겨 이들이 돈벌이 할 분야를 열어 주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가격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는 KT 사유화를 추진하며 경쟁 체제를 통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조치라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114 서비스가 유료화되는 등 가격은 오르고 노동자 5만 명이 해고됐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 2003~2004년에는 주주들에게 50,3퍼센트에 이르는 고배당을 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 설비투자를 삭감하면서 서비스 질은 오히려 악화했다. 그래서 2005년 대구 전화 불통 사건도 일어났다.

사유화 정책은 2002년 철도·가스·발전 연대파업 등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 덕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주춤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한 것도 정체된 사유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외부 충격’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한국전력을 6개 자회사로 나눠 분할매각을 준비했고, 철도청을

대응해 왔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함으로써 미래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MD 참가까지 공식 선언한다면 동북아의 불안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리고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이명박이 외교의 문의 한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최근 부시 정부는 중동에 발이 묶여 북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부담감을 느껴 왔다. 그러나 미래에 상황이 바뀌면 PSI는 매우 위험한 북한 압박용 도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이 PSI 작전중 발생한 충돌을 빌미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다.

반전 운동은 이명박의 위험천만한 친제국주의 정책들이 현실화하지 못하도록 반대 활동에 나서야 한다.

소용돌이

이명박이 MD와 PSI에 참가한다면 장차 한반도는 전화(戰火)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MD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들먹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다. 그래서 부시 정부와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의 MD 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중국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MD 참가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한나라당 따라하기” 통합신당의 어두운 미래

대선 패배 뒤 더 지리멸렬해진 통합신당을 구출할 책임자로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가 낙점됐다. “이명박·이회창·손학규로 이어지는 보수 3형제의 과두정치 시대”(민주노동당)가 열린 것이다.

손학규의 “새로운 진보”는 당 대표 취임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도 주춤거린 “거래세 1퍼센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 양도세 완화조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경련 등 기업주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절감한다”고 했다. “같이 힘을 합쳐서 [2월 국회에서 한미FTA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명박’의 의기투합에 호응한 것이다.

사실 손학규는 이명박 뺨치는 시장주의자다. 그는 한미FTA뿐 아니라 한중·한일·한EU FTA 체결도 적극 지지하는 ‘문지마 FTA론’의 기수이고, 출자총액제한제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는 재벌 옹호론자다. 또 대입 자율화, 교원평가제 도입 등 교육의 시장화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선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의기투합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손학규,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는 주장도 이명박과 다를 게 없다. “우리 정당사에서 가장 협력적인 야당”이 되겠다는 손학규의 다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 출신답게 손학규는 냉정적이고 우익적이다. 2006년 북한 핵실험 때 그는 “지금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며 위험천만한 대북 제재를 선회했다. 또, 신당 경선 당시에는 “더 이상 5·18 광주 정신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의 영령들을 우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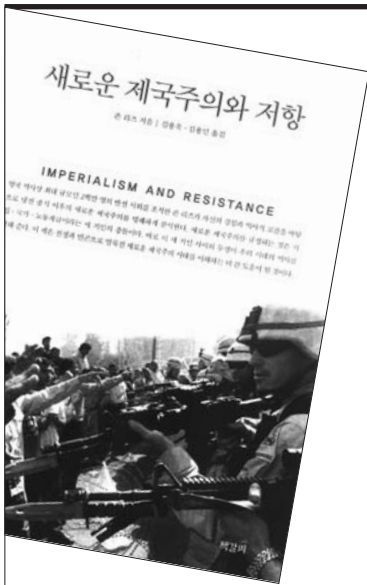
이런 손학규를 내세워 “한나라당 따라하기”로 총선에 임하려는 통합신당에게 미래는 없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통합신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구는 거의 없다.”(‘미디어코리야’ 김형석 대표)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난파선의 위패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 안영근과 이해찬, 유시민이 탈당한 가운데 충청 지역의 위패들은 이회창의 자유신당으로 배를 갈라 탈 기회마저 엿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파산하는 통합신당의 왼쪽 끝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심상정 비대위는 당의 분열과 우경화를 막고 당의 단결과 급진성 보존,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조명훈





존 리즈 지음,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 책갈피(2008)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질서를 풍부하게 분석한 역작

김용욱

얼마 뒤면 조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략한 지 5년이 된다. 이라크 점령의 위기는 끝날 줄 모르고 있고,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동맹들은 심각한 정치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부시는 전쟁 책동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행동을 ‘제국주의’로 묘사하는 다양한 입장의 책들이 출판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존 리즈의 새 책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존 리즈는 고전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데,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제국주의 체제의 특징을 풍부하게 사례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옛 소련처럼 미국 제국주의에 직접 도전하는 국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 같은 신흥 강국들이 나타났으며, 냉전 당시 양대 진영의 경쟁이 부과했던 속박이 사라지면서 국민국가들 간의 경쟁은 더 복잡하고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석유

리즈의 이런 분석은 좌파 내에서 고전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부정하는 입장이 유행하는 요즘 더욱 의미가 크다.

최근 좌파 내에서는 제국주의에 관한 두 가지 대조적 해석이 유행하는데, 하나는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가 《제국》에서 발전시킨 입장이다. 하트와 네그리는 국민국가의 소멸과 “초국적 자본가 계급의 등장”을 말하면서 “세계시장의 완전한 실현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의 종말”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시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하는 등 현실에서 제국주의적 모험이 계속되자 이 입장은 좌파 내에서 약화됐다.

다른 하나는 현재 좌파에서 가장 각광받는 입장으로, 이른바 ‘미국 유일 제국주의’론이다. 레오 파니치와 샘 긴딘이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 이론가들이다. 긴딘과 파니치는 하트·네그리와는 달리 국민국가의 소멸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본들 간 이익을 조율하는 “일반적 조정” 기능을 담당하면서, 제국주의적 경쟁의 필요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들은 제국주의 체제보다 “비공식적 미국 제국”이란 단어를 선호한다.

이런 입장은 다른 열강들의 독자적 이익을 무시하고 그들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

우파 대통령 사르코지는 한편으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경제적·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백승욱 교수가 《역사적 자본주의의 강》에서 적극 차용한 좌파 이론가인 지오바니 아리기도 기본적으로 ‘미국 유일 제국주의’론을 수용하면서 그것의 반편향으로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이상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아리기는 최근 출간한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에서 “중국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문명들 사이의 상호 공존 체제가 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타이완 위협, 아프리카 자원 쟁탈전 참가는 고사하고 신장이나 티베트 같은 공인된 ‘내부 식민지’ 문제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많은 좌파들이 이렇듯 제국주의 열강들 간 경쟁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라크 침략의 원인으로 네오콘들의 비합리성과 판단 실수를 들면서 미국 제국주의와 미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최근 주목받는 ‘유대인-이스라엘 로비론’이 대표적 사례다.

《신좌파 평론》의 편집자 페리 앤더슨은 “이스라엘 팽창주의에 대한 지지는 미국 자본 일반의 그 어떤 논리적 이익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로비의 결과였다”고 말하면서 이라크 침략도 이스라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즈는 이라크 침략이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

이라크 키르쿠크의 유전을 순찰하는 미군 병사

국이 제국주의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한다. 이라크 침략은 경쟁자들에 대한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를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통해 만회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동맹과 경쟁자들을 모두 단속”하는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리즈는 이 책의 3장 ‘석유와 제국’에서 역사적 배경과 국가들 간 세력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며 오늘날 중동 불안정의 근원을 파헤친다. 이 장을 읽으면 새로운 제국주의 경쟁 체제에서 석유자원, 특히 중동 석유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슬람 혐오주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과제와 전략을 다룬 부분도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오늘날 반전 운동의 중요 쟁점들인 미국의 이란 확전 문제와 이슬람주의/이슬람혐오주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목할 만하다.

리즈는 미국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과 이란 같은 지역 소열강이 충돌할 때 양비론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전쟁[의 경우], 만약 제1차세계대전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 간 충돌 때와 같은 태도를 취해 교전중인 국가를 동등하게 반대한다면, 세계 최강대국과 최약소국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된다. 그런 ‘공평한 태도’는 현실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들

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슬람혐오주의는 전 세계 반전 운동에서 제기되는 첨예한 문제 중 하나다. 한국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고,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한국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됐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일부 좌파들은 중동 저항 세력의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들이대며 과거 민족해방 운동에 적용했던 ‘비판적 지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슬람혐오주의 입장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반제 저항의 의의를 완전히 기각한 것이다.

반자본주의 저술가 사미르 아민은 “정치적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반동적이기 때문에 민족해방을 위한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4인터내셔널 이론가이자 중동 문제 전문가인 질베르 아슈카르는 가톨릭 같은 ‘유연한’ 종교와 달리 이슬람은 태생적으로 경직된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이들과는 달리, 리즈는 이슬람주의 조직들의 모순되고 다양한 성격을 지적한다. “이슬람주의 운동의 성격을 단순히 진보적이라거나 반동적이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투사들[의] … 이슬람은 반동적인 사우드 왕가가 가르치는 이슬람과 다르다.”

그러면서 리즈는 반제 민족주의 투쟁의 실패로 형성된 공백을 이슬람주의 조직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슬람주의 문제를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고전 맑스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슬람주의와 좌파의 관계는 민족주의자와 좌파의 관계와 비슷해서 특정 시기와 상황에서는 좌파의 동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기와 상황에서는 좌파와 노동운동을 공격할 수도 있다. 좌파는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 좌파를 포함한 민족주의 운동을 대하는 태도로 이슬람주의 운동에 접근해야 [한다.] … 이슬람주의자들이 제국주의와 국내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한, 좌파는 그들과 함께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좌파는 언제나 조직적·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냉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날 제국주의 전쟁의 정당화 이데올로기인 민주화를 위한 개입 논리의 허구를 파헤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 책의 장점이다.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은 매우 방대한 내용의 책이다. 필자는 여기서 이 책의 몇 가지 장점을 소개했을 뿐이다. 존 리즈의 책은 오늘날 제국주의 체제의 야만성에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이명박의 “경제살리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명박은 “경제살리기” 슬로건으로 대권을 잡았다. 그런데 대선에서 잘 먹혀들었던 “경제살리기”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우선, “경제살리기”라는 구호에서 “살리겠다”는 대상이 되는 “경제”라는 범주는 초계급적인 “(국민)경제”를 지칭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특히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범주라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적대와 계급투쟁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이른바 “(국민)경제”란 최종심에서는 “재벌 경제” 또는 “자본가 경제”이거나, “서민 경제” 또는 노동자·민중의 경제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경제살리기”(위기 극복)란 항상 노동자·민중과 “서민 죽이기”(착취 강화)를 통한 자본가 경제 살리기(이윤율 회복)의 과정이었다. 지난 1997~98년 IMF 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죽어간 경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민중·서민의 경제였다. 지난 10년 동안 재벌 경제는 노동자·민중·서민 경제의 희생 위에서 오히려 더 살랐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의 재벌 경제 편향을 생색내기 수준의 재벌 규제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호도하고 은폐하려 했다면, 이명박의 “경제살리기”는 최근 인수위의 금산 분리 완화와 출생제 폐지에서 보듯이 완전히 노골적인 재벌 지원 정책이다.

이명박의 “경제살리기” 슬로건은 이처럼 재벌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허구이다. “경제살리기”라는 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 경제가 이미 죽어 있거나 거의 빈사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런가?

한국경제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IMF 위기의 해였던 1998년 6.9퍼센트 감소해 뒷걸음질 친 후 김대중 정권 동안(1999~2002) 7.2퍼센트로 ‘V자형’ 회복을 보였다가, 노무현 정권 시기(2003~2006) 4.3퍼센트로 둔화됐다. 그러나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권 시기(2003~2005)에도 한국경제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3.9퍼센트로 같은 시기 OECD 평균치 2.5퍼센트보다 1.4퍼센트 포인트나 높았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들어 경제성장은 이전 시기에 비해 둔화됐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 이유를 저투자에서 찾는다. 이른바 연이은 “좌파” 정권들의 재벌 규제·분배 우선 정책으로 투자 환경과 투자 심리가 악화돼 투자가 감소했고, 그 결과 성장이 둔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시기에 투자가 부

자본주의 역사에서 “경제살리기”란 항상 노동자·민중과 “서민 죽이기”를 통한 자본가 경제 살리기의 과정이었다

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투자율(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39퍼센트를 정점으로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인 2002년에 29.1퍼센트까지 저하했지만, 노무현 정권 후반기인 2006년에도 29.9퍼센트로 더 저하하지는 않았다. <그림>에서 보듯이, OECD 나라들의 경우 투자율은 1990~2004년 평균 20퍼센트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 수치는 1990~97년 무려 40퍼센트 수준에 달했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인 1998~2005년에는 30퍼센트 수준으로 안정됐는데, 이는 OECD 평균치보다 10퍼센트 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2004년 한국의 투자율은 29.5퍼센트로 24개 OECD 나라들 중 1위였다. 그런데 무슨 저투자 타령인가?

<그림>에서 보듯이, OECD 나라들의 GDP 구성의 특징은 높은 투자가 아니라 낮은 투자, 그리고 높은 수준의 가계소비가 장기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점이다. 반면, OECD 7대 강국을 지향한다는 한국 경제의 GDP 구성은 여전히 극단적인 과

잉투자와 과소소비가 특징이다. OECD 나라들의 경우 GDP에서 가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2004년 평균 61.6퍼센트 수준인 것에 비해, 같은 시기 한국의 그것은 52.7퍼센트로 9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향후 한국이 OECD 나라들 경제의 평균치에라도 접근하려면, 이명박이 주장하듯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투자? 한국의 투자율은 OECD 1위 수준

곧 출범할 이명박 정권에게 제기될 진정한 도전은, 이미 죽어 있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그럭저럭 살아 온 한국경제를 당장 들이닥칠 세계경제 위기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말 그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내느냐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 시험에서 필경 실패할 것이다. 무능하기 짝이 없던 노무현 정권보다 더 무지할 뿐 아니라 임박한 세계경제 위기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무능했던 노무현 정권조차 출범 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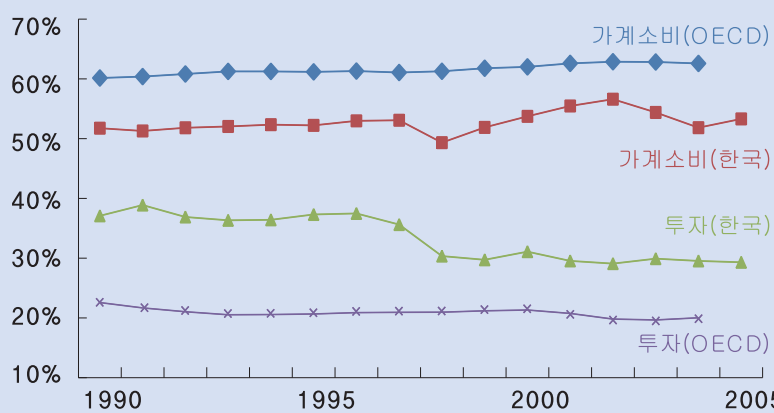
는 독일 모델, 스웨덴 모델, 네덜란드 모델, 유연안정성 모델 운운하면서,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를 벤치마킹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내 동북아 금융허브, 인적자원개발, 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비전2030, 사회투자국가, 사회적 자본,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 금융감독, 시장규율 강화, 한미 FTA 등등으로 좌충우돌했다(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 즉 한국판 “사회적 자유주의”). 이것들은 진정성이 의심되고, 또 대부분 실패했음에도, 어쨌든 과거 박정희식 생산요소 투입 중심의 개발독재 모델의 약발이 다됐음을 인식하고, 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표방하는 소위 “질적 성장” 축적체제로의 전환을 의도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최근 인수위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들에는 새로움이 전혀 없다. 이명박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한국자본주의 축적체제 전환 시도들까지 “좌파” 정책들이라고 폐기하고, 그 대신 1970년대 박정희 군부 독재정권의 친재벌·반민중·정경유착·토건국가 모델을 “선진화” 모델, “신발전체제” 모델이라고 분칠해 내놓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 접근으로 임기 내 OECD 7위의 선진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박정희식 양적 성장을 통한 고도성장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막을 내렸다. 1997년 IMF 위기가 이를 웅변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는가?

현재 한국자본주의의 주된 모순은 생산요소 투입의 부족, 즉 투자의 부족이 아니라 정반대로 투자의 과잉, 과소소비, 무엇보다 낮은 이윤율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투자 촉진 정책은 오히려 과잉축적을 더욱 격화시켜 곧 들이닥칠 경제위기의 규모를 키울 것이다.

» 10면으로 이어짐

<그림> GDP에서 투자와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1990~2005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파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첼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직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직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1월 21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최기영 출당은 ‘혁신’ 과제가 될 수 없다

우려스럽게도 일각에서 심상정 비대위의 과제로 최기영 동지 출당을 언급하고 있다. ‘자율과 연대’는 이미 성명서에서 이 문제를 당의 혁신을 가르는데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최기영 동지를 “영구 제명하여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비대위장도 출당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당해 차디찬 감옥에 갇힌 동지를 내쫓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서글프다. 어쩌다 민주노동당이 ‘악법도 법’이라 하는 지경이 됐는가.

먼저, 최기영 동지는 ‘간첩’이 아니다. ‘일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공안기관의 말보다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한다. 떡값검찰 논란 중 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고작 2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1·2심에서 사법부조차 ‘일심회는 실체가 없다’고 인정했다. 동지보다 공안기관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왜 이것은 보지 않는가. 더구나 국정원과 조종동이 문제 삼은 최기영 동지의 ‘간첩 행위’는 바로 ‘북의 지령을 받고 한미FTA, 파병, 평택미군기지 반대 투쟁 등을 했다’는 것이다.

최기영 출당을 운운하는 당원들은 주되게 당원 정보 유출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기영 동지는 이것을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안기관조차



국가보안법에 후퇴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입증하지 못해 결국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공안기관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은 못 본 척하는가. 백보 양보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옳은 일도 유쾌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NL인지 PD인지, 성질이 급한지 느긋한지가 적힌 문건이 동아시야의 가난한 독재 정부에게 넘어간 것이 그렇게 중범죄인가.

게다가 이것은 엄연한 이중잣대다. 당원 정보 유출이 문제라면, 종파적 충돌 과정에서 국정원 꼬나풀인 <조선일보>에 일부 당원들의 ‘성향’을 시시콜콜 고해바친 사람이나 상대방을 검찰 고발하며 신상 정보를 넘겨 준 사람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

당원 정보 유출은 핑계에 불과하다. 최기영 출당을 계기로 당이 ‘친북, 간

첩’ 딱지를 떼고 기성 체제 안에서 ‘제도권 정당’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 본심이다.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기보다 후퇴하자는 것이다.

‘일심회’ 변호를 직접 맡았던 이덕우 당의장은 이런 본심을 드러냈다. “일심회 사건 때 검사들이 … 주사파 문제가 장기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당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기영을 출당시켜야 한다.]”

최고위가 지난번에 최기영 동지를 당직에서 해임했을 때 <조선일보>는 “진일보”라고 칭찬했다. 이제 출당까지 시키면 기성 체제와 언론은 ‘제도권 정당답다’고 환영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상정 비대위장은 결코 그런 배신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전현정

》9면에서 이어짐

이명박 정책은 경제 위기를 재촉하고 카울 것

2008년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난해 여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새해 벽두부터 세계경제 위기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한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미 극심한 내수 부진에 수출 급감(이미 수출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까지 겹칠 경우 이명박이 공언한 7퍼센트 성장은 고사하고, 1997~98년 IMF 위기 이후 최초의 진정한 불황, 즉 마이너스 성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막가파식 불도저 정책이 임박한 위기를 더 재촉하고, 더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정합니다 - <맞불> 71호에 편자가 실린 이지경 전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의 사면 내용은 석방이 아니라 남은 형기의 2분의1로 감형이었습니다. 이지경 동지와 독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경부운하 건설은 사상 유례없는 과잉투자과 부동산거품으로 귀결돼 아마도 OECD 나라들 중 최대의 경제 위기로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장전입·자녀 위장취업·도곡동 땅·BBK 의혹 등 그가 저지른 온갖 불법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라며 이명박을 찍었던 국민들 다수가 곧바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일 것이다.

다가올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이명박 정권과 지배계급은 자본가의 경제, 재벌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지난 1997~98년 IMF 위기 때처럼 다시 새로운 버전의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노동자·민중과 서민 경제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물론 노동자·민중·서민 대중은 “서민 죽이기”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더는 용납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정말이지, 10년이면 충분하다! 노동자·민중과

서민은 더는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에 현혹되고 포섭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부 진보진영까지 이명박의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 이른바 “경제성장” 프레임에 포박돼, “진보적 성장”, “사회연대전략” 등을 대안이라고 국민들에게 내놓았던 것은 큰 잘못이다.

다가올 경제 위기와 함께 이명박으로부터 등을 돌릴 노동자·민중·서민을 진보진영으로 견인하기 위해 긴급하게 요청되는 과제는 이명박 정권과 지배계급의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프레임 자체를 깨는 반자본주의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마르크스와 트로츠키》의 저자이고,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역자이다.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매각 반대 투쟁에 나선 만도 노동자들

정종남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동자들이 공장이 투기자본에 재매각되는 데 반대해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1월 16일 평택·문막·익산 공장에서 2시간 파업, 17일 전체 조합원 6시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의 96.1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했는데, 이는 노조 창립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 투쟁은 만도의 대주주인 투기자본 ‘선세이지’가 또 다른 투기자본인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KKR)’로 공장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0년 동안 두 차례의 매각으로 겪은 온갖 고통 때문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처음 만도를 인수한 투기자본 로스차일드는 노동자를 쥐어짜서 막대한 차익을 챙겨 갔다.

두 번째로 만도를 인수한 선세이지는 한술 더 떴다. 선세이지는 인원 감축과 외주화를 통해 투자 원금인 1천8백90억 원보다 훨씬 많은 3천1백18억 원을 벌써 회수했다. 이번 재매각 대금 1조 2천억 원도 고스란히 손이익이 된다. 게다가 선세이지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돼 있어 세금 한 톨 물지 않는다.

반면 1998년 만도 부도 당시 공적자금 3조 8천억 원이 부채 탕감에 지원됐고, 같은 해 7월 노동자 1천여 명이 해고됐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국민 세금으로 기업은 회생했지만, 그 성과는 극소수에게만 돌아간 것이다.

이 때문에 만도 노동자들은 “노동 착취 강화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 투기자본으로의 재매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하고 있다.

KKR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기자본으로 구조조정과 반노조 정책으로 악명 높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일치단결해 강력히 맞선다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 노

동자들도 오랜 투쟁 끝에 지난해 말 투기자본으로 재매각되는 것을 저지한 바 있다.

현재 만도 노동자들은 ‘분할매각 반대’, ‘매각시 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투기자본이 거둔 수익을 노동자들에게 환원하라는 노조의 요구도 정당하다.

10년 전 만도 노동자들의 매각 반대 공장점거 파업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선 일격이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의 강제진압에 격렬히 맞섰다. 이어서 벌어진 현대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과 함께 이런 투쟁들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만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명박이 추진할 사유화·매각에 맞선 전초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부는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강력한 파업과 연대로 매각을 저지하고 투기자본의 수익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



“부도난 회사 살려 놔더니 또 투기자본에게 팔겠다고?” 노동자들은 매각이 타결되면 이명박에 맞선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한다

도시철도 파업에 연대를!

김재동
도시철도노조 쟁대위 사이버실천단장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임명한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은 2005년 9월 부임하자마자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비협조적인 회사 간부들은 구 연수원(옛 남산 안기부 건물)에 의자도 없는 빈 사무실로 좌천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의 승인 아래 음성직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5678 창의조직’(5678은 서울의 5호선~8호선을 지

칭)은 ‘직제(조직) 개편’을 빌미로 한 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 인력 30퍼센트 감축과 사유화 프로그램이다. ‘중간조직 폐지, 무숙박 근무, 기술 직종 통합’ 등을 통한 “새 일 찾기”라는 명목 하에 나이트 중간 관리자들과 기술 인력을 자회사 비정규직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인력도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다.

또, 차량 인원 감축을 위해 완전 [무인] 자동운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시민 안전마저 위협한다. 무

인 매표를 실시하고 역무관리소 15개를 4개로 축소해, 운수 업무를 포기(사유화)하고 부대 사업 관리만 하려 한다. 그러면 시민 불편은 더 커진다.

도시철도 노동자들은 음성직의 알팍한 술수를 잘 알고 있고,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마저 포기하려는 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다.

도시철도 조합원들은 파업 찬반투표에서 84.5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쟁을 결의했고, ‘구조조정 철회와 음성직 사장 퇴출’을 위해 1월 31일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기업 사유화와 노동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모든 동지들의 연대를 바란다.

‘위기의 민주노동당 평당원의 목소리로 말하자’ 토론회

종파주의와 자기 폭로로 뒤덮인 2백40분

지난 1월 11일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위기의 민주노동당 평당원의 목소리로 말하자’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의 당원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2백40분 내내 생산적인 토론 보다는 ‘자주파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는 식의 하소연만 넘쳐났다. 그 절정은 ‘분당 계획 문건’으로 유명해진 한석호 씨의 발언이었다.

“어느 순간 내가 범죄자가 돼 있었습니다. 항상 저들을 이겨서 뭘 하려다 보니 범죄자가 돼 있었습니다. 대리투표 했습니다. ○○○ 위원장 당선될 때, 거기에 그 표 있었습니니다. 당기위원 해 놓고도 그랬습니다. … 내일 중앙위에서 사람들, 당원들 다 보는 가운데 당이 제대로 한 번 망가지는 꼴 보고 싶습니다”

“신당의 구체적 내용을 듣고 싶어 왔다”고 한 강진원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이런 분위기를 비판했다.

“이 자리가 무슨 NL 성토대회입니까? 난 이 자리가 정말 맘에 안 듭니다. 이제 이명박 하에서 5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울까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자주파 평등파] 둘 다 패약질만 하고, 좌파[평등파]도 맨날 쇼부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소연

나는 발언 기회를 얻어 분당파가 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종북주의 청산’ 요구를 비판했다.

“‘종북주의 청산’은 실천적으로 두 가지 결론밖에 안 납니다. 인적 청산 아니면 사상 검증이 그것인데 이런 태도는 당뿐만 아니라 운동도 같이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발언 중에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고 심지어 누군가 “그만해, 저리 가” 하며 나

를 밀쳐내고 마이크를 뺏었다. ‘패권주의 반대’, ‘다양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분당론자들이 주도하는 토론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진지하게 당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았다. 동작구위원회 김학규 위원장은 먼저 “진짜 평당원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주최측을 꼬집었다.

“그동안 [평등파가] 문제제기도 제대로 안 해보고 갑자기 이러면 대중이 동의하겠습니까? 호들갑 떨어진 안 됩니다. 대중은 안 그러는데 우리가 나서서 당에 사망선고 내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맡은 부산시당 김석진 위원장의 진행은 비민주적이었다. 토론회 제목과는 사뭇 달리 ‘혁신이나, 분당이나 만 토론하자’며 발언 내용을 제한했고 분당에 반대하는 발언에 토를 달기도 했다.

또, 발언 신청을 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발언 신청도 안 하고 있던 김형택 전 대변인과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에게 발언권을 줬다. 민주노동당 위기에 대해 토론하러 온 진짜 ‘평당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조승수 소장은 적록연대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 그리고 계급연대·사회연대를 신당의 가치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스탈린주의’, ‘종북주의’, ‘주체사상’만 아니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할 만한 얘기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의 4분의 1정도만 분당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듯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주파 비난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분당 주장에는 별 호응이 없었다.

<레디앙>의 호의적인 보도와 달리 이 토론회에서는 당의 위기를 진단하고 헤쳐나가려는 진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장호중

※ 이 글의 전문은 <맛불> 웹사이트를 보시오

삼성 특검과 이명박 특검

두 범죄자를 소환 조사하라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이 있는 지 무려 두 달 반이 지나서야 이견희와 핵심 간부들의 자택, 삼성 본관 전략기획실 등 주요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견희 일당과 범죄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은 삼성의 '심장부'에 압수수색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구체적 사실이 워낙 많았고, '삼성 이견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 이견희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는 시늉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 삼성이 터뜨린 환경 대재앙에 대한 분노는 심상치 않다. 태안 앞바다에 검은 기름을 뿌려 놓고 40일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삼성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해경과 검찰은 사건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민 이영권 씨 영결식에서 고인의 딸은 "기름을 뿌린 사람도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아버지가 왜 삶을 포기하신 것인지 원망스럽다"며 하염없이 눈

물을 흘렸다. 흰 방제복을 입은 어민들이 1만 5천 명이나 모인 영결식장은 삼성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죽음으로 항거한 고인의 뜻을 기억하라" 등 삼성을 비난하는 구호가 적힌 만장 수백 개가 물결쳤다.

"태안군민 다 죽이는 삼성그룹 박살내자", "삼성그룹 보위부대 서산검찰 자폭하라" 등 울분을 담은 팸플릿도 시내 곳곳에 나붙었다. 조만간 삼성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도 할 예정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처럼 들끓는 삼성 비난 여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려"(〈헤럴드경제〉) 온 이견희를 "특검 수사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을 다루"(〈매일경제〉)듯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견희의 개인 집무실에서 수사팀이 가지고 나온 것은 달랑 서류봉투 몇 개뿐이었다. 두 달 반이면 주요 장소에서 핵심 증거들을 모두 인멸하고도 남은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검찰 수사 때도 '떡값판사'들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이견희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 줬다고 폭로했다.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

단이 뽑은 필수 수사 항목만도 36가지에 이른다. 특검이 이 '비리백화점'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견희와 공범들을 소환 조사해야만 한다.

가관

"삼성의 5년짜리 고용 사장"이라는 이명박에 대한 특검도 위험 판결을 면하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시작부터 개운치 않다.

특검에 임명된 정호영은 "다른 사람이 [특검이] 됐으면 기대를 했는데 ...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하며 수사를 대중 덮을 궁리만 하는 듯하다.

정호영이 지명한 특검보들은 이명박의 전 정책 자문위원, 친이명박 단체 소속 변호사, 〈조선일보〉 탈세와 황우석 사기극 등을 방어진 변호사들까지 줄줄이 가관이었다. 최종 임명에서 일부가 제외되긴 했지만, 친이명박·친기업·우파 변호사들을 모아서 뭘 하려는지 알 만하다.

헌법재판소도 특검법의 동행명령권 조항을 '위헌' 판결해 주요 관련자 소환에 발을 걸었다. 삼성 특검 수사팀도 이 판결을 '참고'하겠다고 한다.

이들 특검이 이 나라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양 우두머리인 이견희와 이명박을 알아서 심판하길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다. 삼성 특검이 뒤늦게나마 삼성 본관 압수수색을 하게 만든 반삼성 운동과 여론을 계속 고무해야 한다.

부패·비리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토해 낸 오물이다. 이 오물로 범벅된 이견희·이명박 같은 자들은 부패 고리로 연결돼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따라서 이명박과 삼성의 부패 고리를 쳐내는 것은 이들이 저지르는 반동에 맞서는 주요한 방법이다. 이들이 뿌린 돈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착복한 것이므로, 반부패 투쟁은 노동자 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한몸'이나 다름없는 이견희가 처벌받는 것은 사기꾼 낙인을 지우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이명박에게 악몽과도 같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의 부패와 반동에 맞선 투쟁은 곧 '삼성공화국'에 균열을 내는 일이기도 하다.

진보진영은 이견희와 이명박을 단죄하고 이들이 세운 '삼성 범죄 정부'를 좌초시킬 수 있도록 대중운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승주



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공동행동의 날

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 · 빈곤 · 전쟁 · 차별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일시: 1월 26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광장

주최: 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공동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한국의 1.26 세계공동행동은 이명박이 내놓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친제국주의 공세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기도에 맞선 한국 민중운동의 첫 대응이 될 것이다.

» 관련기사 5면

뉴코아 · 이랜드

설 연휴 집중 타격 투쟁을 건설하자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탄압과 투쟁의 장기화에도 후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2월 설 연휴에 맞춰 다시 한번 집중 매장 타격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월 19일 홈페이지 시흥점을 시작으로 1월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매장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2월 1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매장 앞 집중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랜드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사랑의 교회' 앞에서 촛불기도회를 하며 이랜드 회장 박성수를 압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랜드 생계비 지급을 빨리 매듭 짓고 설 연휴 집중 타격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 투쟁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최영준

